

정부 “한국식 지명 상징” 재확인

UN에 ‘선언서’ 기탁 분쟁화 차단 日선 지명 선점권 노려 분쟁화 시도

■ 한·일 ‘독도교섭’ 쟁점

한국과 일본이 독도 문제와 관련, 물밑 외교 교섭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측이 추진하고 있는 독도 주변 해저 지형에 대한 한국어 표기 문제와 이에 따른 국제수로기구(IHO) 해저지명위원회 상징 문제가 독도 문제 해결의 핵심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 정부가 일본이 독도 지명문제를 국제분쟁으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유엔에 ‘강제분쟁해결 절차 배제’를 위한 선언서를 기탁해 일본이 의도하고 있는 독도 분쟁지형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일 일본이 독도 EEZ 탐사를 포기하더라도 IHO 해저지명위원회 상징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현재 양국간 물밑 접촉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적어도 한국이 IHO에 한국식 지명을 상징하려는 계획을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아직 소타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정부가 지명 상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실 ‘독도’에 다케시마(竹島)라는 명칭을 붙여 자국의 영토라고 강변하고 그 주변 수역에도 자국식 이름을 지어 국제사회에서 통용시켜온 일본 정부는 IHO에 한국식 지명을 상징시키려는 행위 자체가 자국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하고 있다. 독도 부근 해저지형 지명에 대한 선점권을 지키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도 주변 수역은 1978년

부터 IHO에서 ‘쓰시마 분지’ ‘순요퇴’ 등의 일본식 지명으로 불려져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1996년부터 독도 인근 해양 탐사를 시작했으며 2002년부터 해양지명위원회를 가동해 18곳에 한국식 지명을 달고 이를 6월 독일에서 열릴 IHO 해저지명위원회에 상징하려고 준비해왔다.

정부는 그러나 해저 지명을 상징할 시기는 조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가능하면 빠른 시기에 IHO에 상징해 한국식 지명이 통용돼야 하지만 등재 절차에 면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6월보다 늦출 수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정부는 유엔 해양법 협약상의 강제 분쟁해결 절차를 배제하기 위한 선언서를 기탁한 것은 일본과의 갈등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것에 대비한 ‘단호한 조치’로 풀이된다.

외교통상부는 유엔 해양법 협약상 강제 분쟁해결 절차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선언서를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했으며 기탁일인 18일부터 발효됐다고 20일 밝혔다.

선언서 기탁으로 EEZ 및 독도문제 등으로 일본과 분쟁이 발생해 일본측이 이를 근거로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는 경우에도 우리는 이에 응할 아무런 의무가 없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선언서 기탁을 철회하지 않는 한 독도나 EEZ 문제로 일본측과 국제재판소에서 얼굴을 맞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와 해상을 경계로 하고 있어 분쟁 가능성이 있는 일본과 중국은 ‘강제분쟁해결 절차의 선택적 배제’를 위한 선언서를 기탁하지 않은 상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해양경찰청이 20일 일본 측량선의 독도 해역 진입에 대처하기 위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 인근 해역에서 대규모 기동훈련을 벌일 예정인 가운데 이날 낮 12시께 강릉 비행장에서 출동 대기 중인 해경 초계기 헬린저호가 이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4월 국회서도 처리 불투명

한나라 거부...與 미온 대처 국회 문광위 처리 또 연기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 지난해 정국 국회, 올해 2월 임시국회에 이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렵게 됐다.

문화중심도시특별법의 국회 장기 표류는 한나라당의 비협조가 주요 요인이지만 여당 지도부의 미온적 대처, 광주지역 의원들의 정치력 부재도 한 몫 하고 있다.

20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문화중심도시특별법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사학법 재개정 논의가 진척되지 않자 각 상임위의 법률 심의를 보이콧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오는 24일 전체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법률 심의 거부 방침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 상황여서 문광위가 열린다고 해도 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처리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특히 오는 24일 문광위 전체 회의에서 한나라당을 배제한 채 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함께 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을 처리한다고 해도 이

를 다시 법사위에 넘겨야 한다. 그러나 여당이 최대 야당인 한나라당을 배제하고 법안을 처리하려는 함의가 있어 정치권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법률 심의 거부 방침을 철회하고 열린우리당이 문화중심도시특별법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다음달 2월 종료되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동안 문화중심도시특별법이 처리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문화중심도시특별법의 장기 표류의 제일 이유는 한나라당의 비협조와 열린우리당의 미온적 대처가 꼽히고 있다.

심재철, 정중복 의원 등 한나라당 문광위원들은 지금까지 문화중심도시특별법 제정에 사사건건 만류를 걸어왔다.

여당 지도부도 문화중심도시특별법 통과를 위한 당 차원의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여기에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력 부재도 법안 표류의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문화중심 도시 특별법이 장기 표류하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의 비협조가 주요 요인이지만 여당 지도부의 무관심도 한 몫 하고 있다”며 “여당 지도부의 의지가 있었다면 지금까지 특별법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경영권 승계·부채탕감 로비 집중조사

정의선 기아차 사장 검찰 출두

정의선 기아차 사장이 20일 오전 대검 청사에 출두(사건)함에 따라 현대차 그룹 비자금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따라서 검찰은 정 사장을 상대로 편법 경영권 승계 문제와 부채탕감 로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비자금 용처나 김재택 로비 의혹 관련 부분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현대차 그룹 총수 일가와 임직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일괄 결정기로 한 바 있어 정의선 사장의 진술이 다른 임원진의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은 “글로벌버스 주식현납”과 관련 정 회장 부자에 대한 선처를 검토한 적이 결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의선 사장 어떤 부분 조사받나 = 검찰은 정의선 사장의 소환 날짜가 정해지지 훨씬 이전부터 정 사장을 ‘피의자’라고 못박았다. 정몽구 회장이 출국했을 때 정 사장을 출금한 것만 봐도 정 사장에 상당한 혐의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검찰이 “부(富)의 불법적인 축적과 이진을 잘 살펴봐야 하고 경제질서의 투명함도 보장해야 한다”고 수사의 의미를 설명했을 때 이는 정 사장이 적법하게 증여세를 내지 않고 거액의 부(富)를 상속한 과정의 문제점을 짚은 것이기도 하다.

검찰은 정 회장 부자가 현대차 계열사를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의 순환출자 구조로 만들어



이중 한 개 기업만 장악해도 계열사 경영권을 차지하게 만든 뒤 글로벌버스에 급성장시켜 경영권 승계 종자돈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정 사장을 상대로 2001년 3월 글로벌버스에 부자가 전액 출자한 경위와 이후 계열사의 ‘물량 몰아주기’가 이뤄진 배경, 2005년 9월 노르웨이 해운회사인 발헬름센에 회사 자본 25%를 1억 달러에 매각한 이유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2005년 11월 현대모토넷이 본택을 인수합병하면서 본택의 주식가치를 두 달 전 지멘스에 매각할 때 (9만5천원)의 2.45배인 주당 23만3천553원으로 평가해 본택 자본 30%를 가진 글로벌버스의 가치를 상승시키게 된 이유도 추궁 대상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매년 국제 해저지형도에 표기할 지명 결정

6월 독일서 국제수로기구 해저지명소위원회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대한 일본의 수로측량 계획으로 한일간 갈등이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고 있는 가운데 오는 6월 열릴 예정인 국제수로기구(IHO) 산하의 해저지명소위원회가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기구인 국제수로기구 산하의 해저지명소위원회는 해양과 해저의 지

명 심의, 등재하는 과학·기술 기구다. 소위원회는 매년 한 차례씩 회의를 열어 IHO, 대양수심도위원회(GEBCO),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등 국제 해양관련 기관들이 발행하는 해저지형도에 표기할 지명을 결정한다. 이 같은 해저지형도는 그 자체가 ‘소유권’ 등 특별한 법적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국

제적으로 권위있게 통용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현재 총 11명의 국제 해양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에는 일본측 위원 1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비해 한국인은 없다. 우리나라는 수년 전부터 앞서버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며 6월 21~23일 독일에서 열리는 회의에도 앞서버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일본측이 측량계획 철회의 조건으로 6월 열리는 해저지명소위원회에서 동해

상 18개 해저지명의 한국명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측의 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6월 독일에서 열리는 해저지명소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말로 된 ‘울릉분지’와 ‘이사부 해산’ 등 울릉도 독도 인근 해역지명 18개에 대한 등재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북위 36도52분~37도22분, 동경 130도~130도54분 사이 해저에 위치한 울릉분지는 일본이 이미 쓰시마(對馬) 분지로 널리 사용하고 있어 우리측이 해저지명소위원회에 지명등재를 신청할 경우 양측간에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도심속의 작은 이태리

Little Italy Tel.062-655-8211 FAX.062-655-8212

54번지

부담없는 가격으로 그해 최고의 식재료만을 엄선한 고급 요리와 서비스

세련된 분위기, 이태리만 느낄 수 있는 맛, 작은 이태리

Little Italy

11월 54번지, 11월 54번지, 11월 54번지

11월 54번지, 11월 54번지, 11월 54번지